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

SANDBOX

신산업 8개 분야

1,266건 사업 승인

308건 규제 개선

* 24년 6월 누계

“신산업 규제혁신의 플랫폼”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1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민간 전문가 중심, 제3의 조정기구 설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개편)

- 심의 지역, 부가조건 개시 지역, 법령개정 지역 등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 강화



● 규제샌드박스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 8개 전문분야 공통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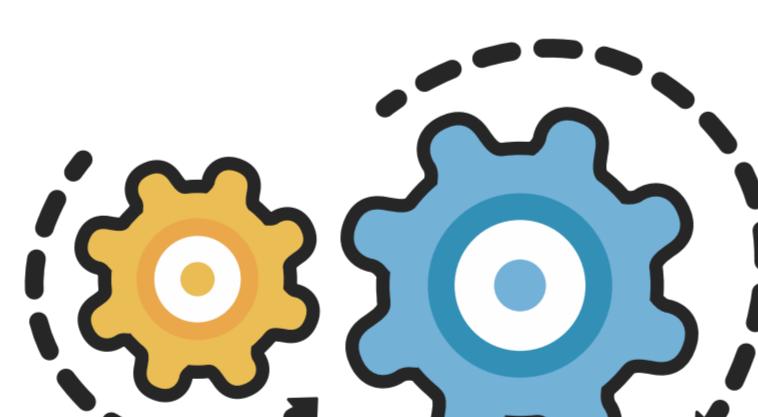


2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① 접수·심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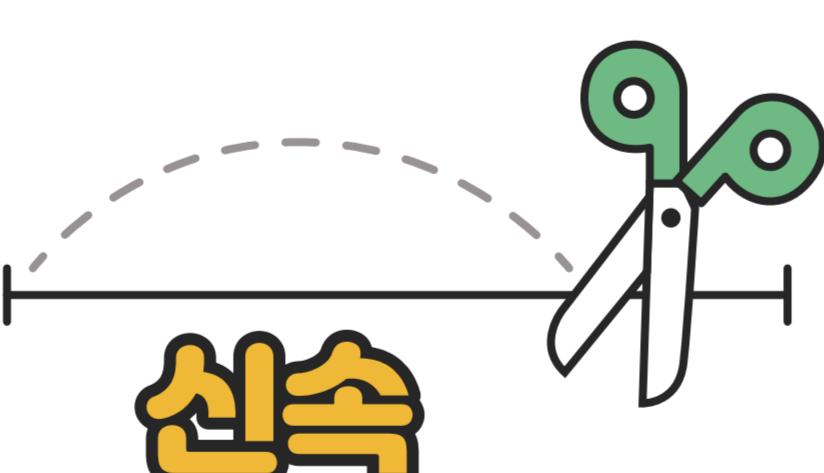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 시, 이견 조정 강화

-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협의 불성립 시
‘혁신위(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가 추가 조정



동일·유사 사업, 신속 처리

-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여 동일·유사 사업은 신속히 특례 부여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규제특례를 부여



②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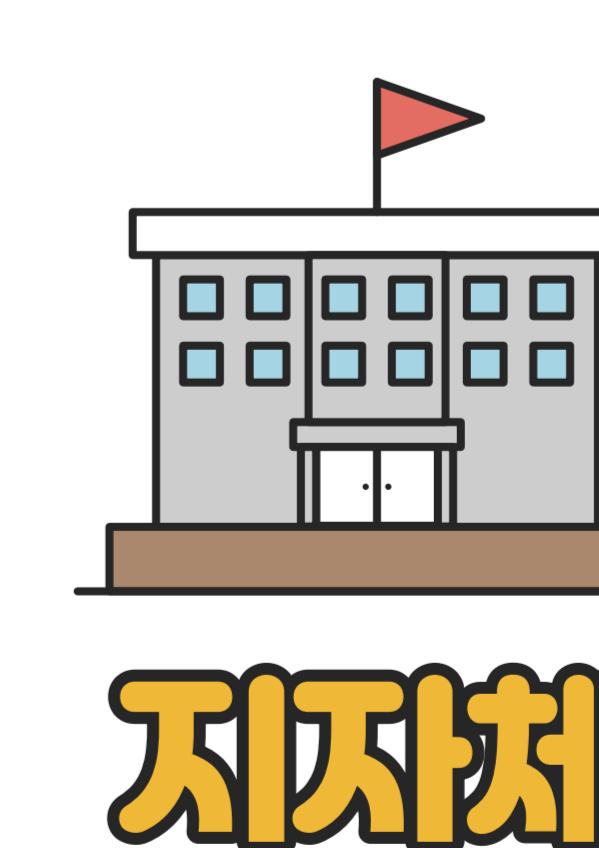
‘규제특례위원회’의 부가조건 적정성 검토 강화

- 부가조건 부여기준 마련,
실증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부가조건 부여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실증 지연, 방지!

-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추진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자체 협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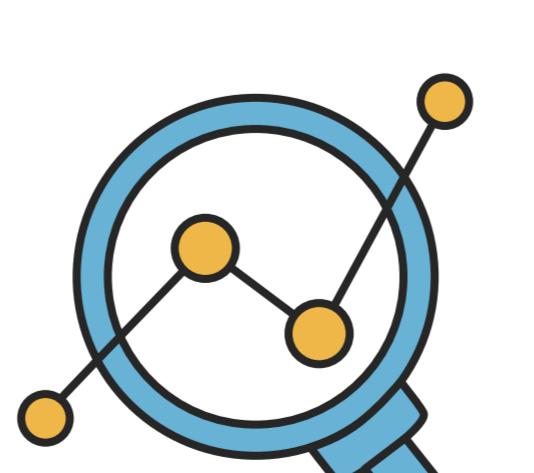


지자체
사업자

③ 실증진행 단계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의 축적·관리 강화

-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
-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 마련 등



④ 법령정비 단계

법령정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실증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규제부처가 현 단계에서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
- 실증 종료 전 규제 개선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 정기 점검 등

